

트럼프 '비상사태'...민주·백악관 정면충돌

“가장 끔찍한 행정적인 월권”
“의회 불복행 거부권 행사”
정당성 논란...줄소송 예고



15일 밤(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항의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재발을 막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여야가 합의한 예산지출법안에 서명한 지 하루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자금 조달을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자원사격'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 정면 충돌에 돌입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17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의회가 불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반대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미리 경고한 것이다.

밀러 고문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다음 세출 주기가 끝날 때까지 아마 수백 마일의 장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국경장벽 상당 부분이 내년 대선 직전인 2020년 9월까지 건설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 회계연도는 10월 1일 시작해 이듬해 9월 30일 끝난다.

공화당 '친(親) 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국가 차원의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다.

공화당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 창립자인 집 조던 하원의원도 ABC '디스 워크' 인터뷰에서 비상사태 선포는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다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자신은 비상사태 선포를 지지하지만, 이를 헌법 위반 또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양당 의원들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상사태 선포 반대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나중에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이번 국가비상사태를 전례로 삼아 기후 변화 같은 민주당의 우선순위 등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불필요하고 어리석으며, 미국 헌법과 모순된다"며 "우리 설립자들은 '최고 경영자'가 세금을 걷고 그 돈을 그가 선택한 대로 쓰도록 하게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비상사태에 제동을 걸겠다며 공세에 날을 세웠다. 비상사태 선포

에 반대하는 결의안 제출도 계획 중이다.

에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도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인터뷰에서 위험 소지를 언급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보다 더 좋지 못한 사례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권력을 너무 늘리고 있다"며 공화당이 이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테미 덕워스 상원의원도 '디스 워크' 인터뷰에서 비상사태에 대해 "그게 국경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정부와 동등한 권력 기구이고, 그는 행정적인 월권(executive overreach)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부적절하다"

며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조치를 막을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원이 비록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비상사태 선포를 막기 위한 표는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하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도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분명히 즉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미국시민자유연맹과 비영리 감시단체인 공민(Public Citizen) 등 사회단체들도 소송 제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중장>

<169> 우승유

우승유(牛僮, 779-847)의 자는 사암으로 현 간주성 금태에 해당하는 안정 순고 출신이다. 당 후기 유력 정치인으로 이덕유와 별인 우이(牛李) 당쟁의 주역이다.

805년 진사에 급제해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우승유-이종민-황보식은 808년 실시된 책사에서 조정의 폐단을 지적했는데 시험감독관 위관지가 이들을 장원으로 선발했다. 이를 못마땅히 여긴 재상 이길보 때문에 현종 재위기간 중용되지 못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길보의 아들 이덕유와 오랜기간 정치적으로 갈등했다. 유명한 우이 당쟁이다. 820년 현종이 죽고 목종이 즉위하자 이봉길의 재상, 이덕유가 어사중승, 우승유가 호부시랑, 한유가 병부시랑으로 임명되어 당파 싸움이 본격화되

우승유가 재상 출신 송신석이 모반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옹호해 개주사 마로 좌천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결국 한림학사 이훈과 정주를 발탁해 환관 제거 계획을 추진했으나 유명 한감로지변(835)이었다. 그러나 여설론 계획으로 거사가 실패하고 구사량 등 환관 세력은 공신을 대거 처형했다. 이로써 모든 실권이 환관에게 집중되었다. 환관이 있는 북사(北司)가 사실상 조정이었다. 화남절도사로 있던 우승유가 837년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자 이덕유가 뒤를 이었다. 이덕유는 전임자가 공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조정에 상주했다. 우승유도 이덕유를 반박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큰 소동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지만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특히 당파성이 강한 이종민이 **반이덕유** 입장에서

이덕유와 별인 '우이 당쟁' 주역

었다. 추가로 재상을 선임해야 했는데 이덕유와 우승유가 유력 후보였다. 이덕유는 뛰어난 지략으로 목종의 신임이 두터웠다. 우승유는 어사중승, 호부시랑을 거쳤는데 청렴한 성품으로 평이 좋았다. 특히 선무절도사 환희의 뇌물을 거절해 황제의 신임이 더욱 두터워졌다. 수석 재상 이봉길은 이덕유를 위서관찰사로 좌천시키고 우승유를 밀었다. 823년 봄 우승유가 재상으로 임명되었다. 목종이 죽고 유희에만 관심 있는 경종이 즉위했다. 조정은 이봉길과 실제 환관 왕수징이 좌지우지했다. 현종 때와 같은 활력을 상실했다. 825년 무창군절도사가 되어 지방으로 내려갔다. 환관 세력과 거리를 두고 권력 싸움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처신이

우승유를 강력히 지지하는 바람에 우이 당쟁이 더욱 심화되었다. 당 왕조 역사상 가장 긴 당쟁이었다. 이덕유는 읍서를 통해 관리가 된 반면 우승유는 빈한한 가문 출신으로 진사 시험을 통해 관직에 들어왔다. 현격한 가문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쉽게 해소될 수 없었다.

840년 무종이 즉위했다. 무종은 화남절도사 이덕유를 재상으로 발탁했다. 이덕유는 무종 재위 5년간 재상으로 있으면서 이종민, 우승유 세력을 철저히 견제했다. 그들과 친한 백거이를 재상으로 쓰려는 무종의 인사에 끝까지 반대했다. 무종 연간 우승유와 이덕유가 가장 대립한 것은 하북의 소의진 처리 문제였다. 소의진에 강경한 입장인 이덕유는 이종민과 우승유가 소의절도사 유충간에게 보낸 친필 서한을 발견하고 이를 무종에게 고자질했다. 결국 우승유는 태자소보로 이종민은 장주사로 좌천되었다. 이종민은 이후 순주 장사로 좌천되었다. 이덕유의 승리로 발탁하려 했으나 일이 꼬여 이종민이 재상이 되었다. 우승유와 가까운 이종민은 이덕유를 정주절도사, 활주절도사로 내치고 무창절도사로 있는 우승유를 재상으로 추천했다. 환관을 제거하기 위한 목종의 계획은 측근 송신석이 모반 사건에 연루되면서 좌절되었다. 환관 왕수징은 암발을 요구했으나

847년 무종이 죽었다. 시호는 문간이다.

美상무부 '車관세 보고서' 백악관 제출...한국 자동차 운명은?

국가 안보 위협 판정 내린 듯
90일 이내 관세부과 여부 결정
美 자동차·부품업체 강력 반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법에 따라 상무부가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방식을 90일이 되는 5월 17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아직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수입규제를 시행하라고 권고할지 확실치 않다. 그러나 한국이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미국을 설득할 시간이

적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 석달 기한도 확실성을 담담할 수 없다. 상무부가 작년 1월 11일에 제출한 철강 보고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진 기한이 4월 11일까지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약 한 달 앞선 3월 8일에 "3월 2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과 지금까지 언행을 고려하면 그가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통상 당국의 설명이다.

산입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에 물어봐도 '모든 것이' 미스터 T(트

럼프)에 달려있어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의 2017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약 157억달러(약 17조6000억원)로 멕시코(469억달러), 캐나다(425억달러), 일본(398억달러), 독일(202억달러)에 이어 5위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한국과는 한미FTA 개정을 끝냈으니 관세에서 빼준다'인데 한미FTA와 무관하게 한국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며 "양쪽 다 가능성이 있고 현재로서는 전혀 가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준주거지역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감정/시세-11억
- 급매 - 8억(2019년 2월 28일까지)

문의. 010-6834-7400